

이슈브리프 899호
(2026. 9.18)

미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와 시사점

제899호

유현정 yhj@inss.re.kr
김일기 ikkim@inss.re.kr



국문초록

오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4개월만의 재회이자,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미중 관세휴전 만료(11.10)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 합의의 이행이 부진하고 양국 갈등이 확대되어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새로운 돌발의 제보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 점검과 후속조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기술·핵심광물의 맞교환 논의로서, '빅딜'보다는 관세휴전을 1년 연장하고 대중국 관세 상한을 유지하는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AI·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으로서, 수출 통제와 '기술 탈취' 공방을 둘러싸고 양국 지도자 간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셋째, 대만과 이란 문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넷째, 북한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력이 가능한 의제로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중국 역할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관리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미중 협상 결과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발 '깜짝 공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중 간 후속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이익이 반영되도록 미중 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미중 정상회담, 관세휴전, AI·반도체 기술패권, 북미대화 재개, 중국 역할론

오는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4개월만의 재회이며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시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이다. 시 주석은 같은 시기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워싱턴 회담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방미의 목적이 다자무대에서의 위상 과시보다는 미중 양자관계의 관리에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11.3)와 미중 관세휴전 만료(11.10)를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향후 미중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제들이 어떤 수준으로 논의될 것인지를 선행 검토하여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징 합의의 이행 부진과 취약한 신뢰 위의 위태로운 안정

지난 5월 양국 정상은 베이징에서 만나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무역전쟁을 당분간 휴전하는 대신 중국은 보잉 항공기 200대와 2028년까지 매년 미국산 대두 2,500만 톤을 포함한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희토류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와 미중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신설하여 ‘비민감’ 부문의 관세조정과 투자규제 완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미중관계는 ‘구조적인 경쟁’이라는 틀에 갇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급망 무기화를 우려하여 부품조달과 서비스 보장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보잉 항공기 구매계약은 난항을 겪고 있고, 미국산 대두 구매 역시 약속한 연간 구매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자위원회’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무역위원회의 첫 과제인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 역시 품목 분류를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신뢰 없는 거래가 합의사항의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양국관계는 오히려 갈등의 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의 거대 민간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 목록에 등재하자 중국은 MP Materials 등 10개 미국기업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였다. 지난달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과 그 지원세력을 겨냥한 사상 최대의 제재안인 ‘경제적 고립작전’을 발표(8.24)하면서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을 포함해 그 어떤 세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고, G20 재무장관회의(9.1)에서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핵심광물 무기화’를 겨냥한 문구에 중국만이 반대하면서 공동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하였다. 정상회담을 3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다자무대에서 고립시키는 구도를 연출한 셈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대외적 영향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올해 첫 순방지로 북한을 국민방문하며 ‘세계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북중간 전통적 우의’를 재확인했다. 이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키르기스스탄(SCO 정상회의)과 이집트를 잇달아 방문하였고, 7년 만의 인도 방문(BRICS 정상회의)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광폭 외교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행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러시아·이란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한편, 미국이 북핵·우크라이나 전쟁·이란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려는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5년 만에 서울을 방문(8.19~20)하여 11월 선전(深圳)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외교를 조율하는 등, 중국은 워싱턴 회담 이전에 한반도 관련국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두는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4개월간 미·중 양국이 갈등과 경쟁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워싱턴 정상회담의 개최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정상급 대화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미·중관계를 관리하고 안정화하려는 양국 지도부의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5월에 체결된 양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돌발의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워싱턴 정상회담은 베이징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관세 휴전 연장과 관세·기술·핵심광물의 맞교환: ‘빅딜’보다 ‘시간 벌기’

미·중 양자관계에서는 관세·기술과 핵심광물의 맞교환 논의가 핵심의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관세인상을 유예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유예하는 경제적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 휴전 협정은 올해 11월 10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년으로 미루고 휴전 협정을 또다시 1년 연장하며 대중국 관세 상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안정과 단기적인 국내경제 안정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미 중간선거 직전 트럼프 행정부의 '10월 깜짝 공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 양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비민감 분야에서의 새로운 관세 인하조치 발표가 예상된다. 최근 양국의 무역 협상단은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전략적·비필수적 부문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I·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수출통제와 '기술 탈취' 공방의 향방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부문의 갈등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을 공개하면서 AI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직접 거명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AI 속도 조절론'을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AI 기술우위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딥시크·문샷 AI·알리바바 등 6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AI 모델을 대규모 증류(distillation)하여 기술을 모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새로운 형태의 '기술 탈취'로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고성능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산 AI 칩에 원격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수출통제, 접근성 규제, AI 안전기준, 사이버 보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양국 지도자 간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만과 이란 문제: 기존 입장의 재확인과 의제의 관리

지역·글로벌 의제 가운데 대만 문제는 양측의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좁아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 베이징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충돌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이며, 미국의 핵심이익인 제1 도련선(First Island Chain)의 중요거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140억 달러가 넘는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를 여전히 보류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계속 반대하면서 무기 판매의 지속적인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 문제는 베이징 회담에서 합의한 이란의 비핵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보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여러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이 ‘경제적 고립작전’에 따라 중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할 경우 양국 간 무역 긴장과 함께 미국의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접근을 위태롭게 하는 보복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도록 회담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에너지의 약 절반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로 중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 축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역할론’의 부상

북한 문제 역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의제다. 북한 문제는 다른 의제와 달리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여,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중재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재개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대화재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강화로 외교적·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선택지를 다원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북미대화에서 느꼈던 실망감을 고려할 때, 협상테이블 복귀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대화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수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정부는 회담 이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중 간 후속조치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종합적으로 볼 때, 워싱턴 회담은 베이징 회담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획기적인 돌파구나 빅딜(Big Deal)의 성사보다는 미중 관계의 관리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휴전을 연장하고 농산물 구매를 확정하며 희토류 공급문제를 해소하는 등 단기적인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관세를 유지·완화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안정화함으로써 기술 자립과 무역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중 양국이 상대방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구조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무역·희토류·AI 경쟁·대만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일정한 가드레일을 설정함으로써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또는 12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추가 정상회담에 합의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미리 예정해 둌으로써 양국 갈등이 관계의 전면적 악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담뿐 아니라 이후 전개될 경제·안보 국면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우선 미중 간 관세·핵심광물·AI 협상 결과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기회와 도전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발 ‘깜짝 공세’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능력 조사에 착수했으며 저가 수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협상방안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미중 간 후속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담 이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역할론과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대화재개 논의가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미중 양국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북미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